

양식산업연구실

마창모 전문연구원_mcm1866@kmi.re.kr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국가행동이행계획 마련

2014. 11.

CONTENTS

- 요약
- I. 서론 ... 01
- II.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 분석 ... 03
- III. 수산 선진국의 NPOA 사례 ... 15
- IV. 한국형 국가행동이행계획(NPOA) 기본방향 ... 23
- V. 한국형 국가행동이행계획(NPOA) 개정(안) ... 27
- 부록 ... 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 IUU어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고, 다양한 수산업 관련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가 없는 서부아프리카 해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감시감독통제의 어려움으로 불법어업을 방조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었음
-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에 따라서 금년에 개정되는 국가행동계획(NPOA)을 국제적 규범의 틀보다 더 강력한 행동계획으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EU는 FAO의 국제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보다 강력한 IUU법을 개별 법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규범으로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같이 개별적인 IUU법은 없으나 국가행동계획(NPOA)을 통해 IUU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사례를 조사하였음
- 국내법상으로 통제가 어려운 자국민 통제 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국가행동계획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규정 이행 방향을 검토하였음
 - 미국은 레이시법을 통해 미국 관할권역 내에 어획물 또는 수산 제품이 양륙, 수입 또는 반입 되는 등 불법행위와 미국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IUU어업에 가담한 미국민에 대한 소추를 진행해 왔음
 - 일본은 해외어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은 사전에 실 투자액을 재정부(The Ministry of Finance)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부처는 공공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획의 경우,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금년에 개정되는 국가행동계획은 FAO의 IPOA 규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더 나아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규범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POA 작성의 기본 원칙은 기국의 책임, 항만국 책임, 연안국 조치, 시장국 조치 및 자국민 통제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 포괄적·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FAO 등 범세계적 기구, 수산업계, 어업공동체 및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 하에 상호간 밀접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IUU어업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법 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개도국과의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음

I. 서론

▶ IUU어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고, 다양한 수산업 관련 문제 야기

- IUU어업은 수산관리 목표를 저해하며, 남획을 야기하여 자원 회복 노력을 방해하여 심지어 어업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IUU업자들은 임금, 안전 표준 및 기타 생활 및 작업 환경 등과 관련한 선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기도 하고, 식품 안전, 수생 동물 위생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IUU어업을 통해 생산된 어류가 수입되는 국가의 소비자와 수산 자원에 잠재적 피해를 가함

▶ 국제적 수준의 국가행동계획(NPOA) 수립을 통한 국제사회 신뢰성 확보

- 2005년 2월 한국은 FAO 국제행동계획(IPOA)에 따른 국가행동계획(NPOA)를 수립하여 FAO에 보고하였으나 2008년 해양수산부 조직 폐지에 따른 IUU어업 근절 정책의 지연으로 2년이 경과하였음
- 지난 10년간 한국이 취했던 NPOA 이행 상황을 보면, 해외수역에서 한국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

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 정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해외수역의 불법어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환경 및 수산업 환경에 맞는 억지력 있는 NPOA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에 동 연구에서는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 선진국의 NPOA 사례 등을 통해 한국 국가행동계획(NPOA) 기본방향과 개정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함

Ⅱ.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 분석

1. 국제행동계획(IPOA) 마련 연혁

-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할 필요성 논의
 - 이 위원회는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 어선 및 IUU 어업의 증가에 우려 표명
- 1999년 3월 수산업에 관한 FAO 각료회의에서 IPOA 성안 선언
 -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FAO가 행동규범 제4조에 규정된 대로 각국, 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IMO와 같은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조화된 노력을 통하여, “편의치적” 어선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다룰 국제행동계획(IPOA)에 대한 성안 선언
- 2000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IUU 어업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 2000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호주정부는 FAO와 협력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IUU 어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 2000년 10월, 2001년 2월 FAO 기술협의회 개최
 - IUU 어업에 관한 FAO 기술협의회가 2000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고, 추가 기술협의회가 2001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

- 2001년 2월 23일 FAO 기술협의회에서 국제행동계획초안 채택
 -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초안이 기술협의회에서 채택되었고, 보고서의 검토 및 최종적인 채택을 위하여 제24차 수산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2001년 3월 2일 수산위원회는 국제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

2. 목표와 원칙

- IPOA의 목표는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적절한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 포괄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는 것임
-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IPOA는 다음의 원칙과 전략을 활용함
 - 참여와 조정: IPOA는 직접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지역수산 관리기구 또는 FAO 및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함. 성공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밀접하고 효과적인 조정과 협의, 그리고 IUU 어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 관련 지역수산기구 및 범세계적 기구간의 정보의 공유임. IUU어업을 억제하는데 있어 업계, 어업공동체, 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가 장려되어야 함
 - 단계적 이행: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IPOA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계획 그리고 지역적, 세계적 조치의 가능한 가장 신속하고 단계적인 이행에 기초하여야 함
 - 포괄적·종합적 접근: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모든 어선어

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함. 국가는 항만국 조치, 연안국조치, 시장 관련조치 및 국민이 IUU 어업을 지지하거나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설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관할권을 사용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 국가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사용하도록 장려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이들 조치들이 종합적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장려해야 함

- 보존: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장기 지속적 이용, 환경보호와 일치하여야 함
- 투명성: IPOA는 규범 제6.13에 따라서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 무차별: IPOA는 어떤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 없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

3. IPOA에서 이행해야 할 핵심 내용

1) 모든 국가의 책임

■ 국제제도의 적용 : 비준, 수락, 가입한 국제제도 이행 문제

- 1982년 UN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의 관련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함
- 국가는 1982 UN협약, 1995 UN어류협정 그리고 1993 FAO 이행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이들 관련 국제제도를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들 조약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함
- IPOA는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당사국에게 1995년 유엔어류협정, 1993년 이행협정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관련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공해에서 자국의 국민이 조업하는 국가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자국민에게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1982년 유엔협약 제7부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해야 함

■ 국가법규의 적용은 법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무국적 선박, 제재조치, 비협력국, 경제적 유인, 감시·통제·검색(MCS) 등을 고려해야 함

○ 국가의 법규는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통해 IUU어업 지원 및 종사를 금지하도록 함

○ 공해상 무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은 국제법과 일치해야 하며, 자국민 IUU어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며,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일치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함

○ IUU 어선에 대해서는 수산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한편, 출어부터 판매까지 포괄적인 MCS를 실시함

■ 각국은 IPOA 채택 후 3년 이내에 IPOA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함

○ 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들은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해 관련 지역수산기구에서 채택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국가는 업계, 어업공동체 및 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참가를 장려해야 함

○ 최소한 국별행동계획의 채택 4년 후 국가는 계획의 비용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하고 IPOA 제6부의 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들 계획의 이행을 재검토해야 함

- 국가는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내부적으로 조정 되도록 보장해야 함
- 수산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IUU어업의 공개, 기술적 능력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설립 및 국제협력 등이 필요함
- 각 국가들은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IUU 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는 데 있어 관련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협력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된 형태로,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구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해야 함
- 조업에 관한 모든 관련자료 및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 관리 및 입증에 협력함
- 각국의 MCS 실행자 및 집행자로 하여금 IUU 어업에 관한 수사에 협력하고, 이를 목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능하게 함
- 1993년 FAO이행협정에 따라서 기국은 FAO, 연안국, 관련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에게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관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기국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된 적용 가능한 법률과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위해 협력해야 함

2) 기국의 책임

■ IUU어업 경력 어선의 등록 회피

- 기국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IUU 경력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함
 -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더 이상 그 선박에 대하여 법적, 수익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기국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IUU 어업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결정한 경우
- 용선약정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 즉 기국 및 그러한 약정을 수용하는 모든 국가는 각각 그들의 관할 범위 내에서 용선 어선이 IUU 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국은 선박이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기국이 채택하는 조치와 표준은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다른 국가로 바꾸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통일되어야 함
- 국가는 “flag hopping”, 즉,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 또는 규정의 불이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국적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변경하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및 자국 국적 부여의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자국 국적선의 기록 관리 및 IUU어업 경력 기록

- 기국은 선박등록부의 운영과 국가가 유지하는 어선기록사이에 연관성을 보장하

여야 함. 그러한 기능이 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기능에 책임있는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보장해야 함

■ 어업 허가의 조건 및 허가장의 내용 규정

- 국가는 공해에서 1982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국가관할 수역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 조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함
- 기국은 자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 밖의 수역에서 자국선박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도록 하고, 연안국이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자국수역의 어떠한 어업도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발급된 어업허가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함
- 허가장의 내용은 선명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어업허가 수역, 범위, 기간, 어종, 허가받은 어구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연안국 조치

■ EEZ에서의 IUU어업 방지 조치 이행

- 연안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 연안국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조치 중에는 다음의 조치를 포함함

- EEZ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MCS, 적절한 경우 인접 연안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의 협력 및 정보교환

- 어떤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선박이 선박기록에 기입된 경우에 한해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 자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적절한 경우 어업활동을 기록하는 조업일지를 유지하게 하고, 연안국 수역에서 어류 또는 수산제품의 해상전재 및 가공이 연안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함
-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자국수역의 입어규제, 특정한 선박이 IUU어업의 기록을 가졌다면, 제3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수역에 어업허가를 주지 않도록 함

4) 항만국 조치

■ IUU어업 종사 확인 정보 요구

-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국가는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 및 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그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이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업허가증 사본, 조업 일정의 상세 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사전정보를 요구해야 함

■ IUU어업 양륙·전재 금지

-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 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만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의 어류 양육 또는 전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 선박의 기국에 통보해야 함
- 항만국 조치는 확인된 선박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어획물의 양육과 전재를 금지시킬 수 있음

■ IUU어업 조사 어선에 대한 적절한 조치

- 검색 도중에 그 선박이 항만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 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항만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함. 항만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IUU어업 통제 수립 및 공개

- 국가는 항만국 통제관의 항만국 통제를 위하여 훈련, 기술적 지원, 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 및 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 조치

■ IUU어업 어획물 자국 수입·유통 금지

-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하여 IUU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 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어선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교역관련조치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관련 국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때 일방적 교역관련조치는 피해야 함

■ WTO 협정 채택 및 이행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 또는 수산제품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

인 하에 교역해야 하며, WTO의 원칙, 권리, 의무와 일치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 특정 어종 교역관련 조치

- 국가는 IUU 어업을 예방, 방지를 위해 WTO와 일치하는 다자간에 합의된 적절한 무역관련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함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마련한 다자간 무역관련 조치는 특정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교역이, 어떠한 경우에도 IUU 어업을 장려하거나 1982 유엔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침해하지 않도록 협력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포괄적 IUU어업 교역 방지 조치 및 법규 제정

- 국가는 수입자, 전매자, 구매자, 소비자, 장비공급자, 은행가, 보험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 및 일반 대중이 IUU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 그 조치는 국내법상 가능한 정도까지 IUU어업을 하고 불법어업으로 생산된 어류 및 수산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으며,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HS 제도 도입

- 국가는 IPOA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류 및 수산제품에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함

6)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수산물관리기구 채택 정책 및 조치의 이행·집행의 보장 및 협력

- 모든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그들이 구속하는 IUU 어업관련 정책 및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러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IUU어업 방지 조치

- 모든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의 성공이 중요하므로,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로 인하여 당해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음
- 이를 위해 국가는 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하는데 동의하고,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는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협력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국 선박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비협력국 참여

-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해당 수산업에 이해를 가진 비협력국들이 기구에 가입하여 이행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관련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 기구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이행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국제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비체약국의 참가와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함
-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행동하는 국가는 IPOA 제78조 및 제79조의 이행에 있어 필요시 비체약국을 지원해야 함

■ 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의 IUU어업 주의 환기

- 어느 국가가 자국적 어선 또는 자국의 국민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할하는 어류자원에 영향을 주는 IUU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때, 그 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는 국가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함

Ⅲ. 수산 선진국의 NPOA 사례

1. 미국

■ 레이시법(the Lacey Act)을 이용한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미국 레이시법(the Lacey Act)에 따르면, 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외국의 법, 조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 소유 또는 판매되는 어획물을 수입, 수출, 운반, 판매, 수령, 획득, 소유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임
 - 미국 국민이 특정 형태의 IUU어업에 가담하는 경우, 미국은 레이시법에 따라 소추를 진행해왔음
 - 미국 관할권역 내에 어획물 또는 수산 제품이 양륙, 수입 또는 반입되는 등 해당 불법 행위와 미국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만 소추함
- 미국 국민 (및 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RFMOs에서 채택된 보존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국내법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RFMO 규범에 어긋나는 어업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레이시법을 위시한 기타 수산 관련 국내법을 강화할 계획임
- 미국은 IUU어업에 가담한 외국 어선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 국민을 적발하기 위한 능력을 배가하는 방안 고려
 - 이를 위해 현재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 관련 감시, 감독, 통제 활동 협력 및 공조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IMCS)” 및 기타 국제 협력 체계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타국으로 어선 선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직접적

법적 근거는 없지만 “1998년 수산법”에는 한 번 선적을 변경한 대형 어선은 미국 선적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

■ 무국적 선박에 대한 법 집행 조치 허용

-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 모두, 모든 선박에 대해 국적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적이 없는 선박이나 무국적 지위를 내세우는 선박을 “미국 관할권이 적용되는 선박”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무국적 선박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매그너슨 스티븐스 보존관리법”으로서, UN총회 결의안 제46/215호를 위반하여 공해상 대형 유자망 어업에 가담한 무국적 선박을 나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1999년 중국이 등록 사실을 부인한 “잉파(Ying Fa)”호의 공해 유자망 어업을 적발, 나포한 사례가 있음
 - “공해 준법 어업법”은 무국적 IUU선박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동 법에 따르면, 미국은 공해상에서 미국이 인정한 국제 보존 관리 조치를 위반한 무국적 선박을 기소할 수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원 기국이 신규 기국으로부터 선주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선박이 신규 기국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원 선적을 말소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안 923을 승인함
- 미국 정부는 다수의 국제 수산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법 및 국내법과 부합하는 MCS 매커니즘 및 제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이 가입한 몇몇 국제 협정에서는 이미 특정 조건 하에서, 공해상 조업 중인 외국 어선에 대해 승선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승선 검색이 명시 되어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보존협약에 서명하였고, 매그

너슨 스티븐스법에 따라, 미국은 미국 관할 수역 내 조업하는 모든 선박 및 공해 상 조업하는 미국 선박에 대해 승선 검색을 실시할 수 있음

■ 미 해경 “국내 선박 서류 등록 센터 (NVDC)”를 통해 전국 등록부에 등록

- 순톤수 5톤 미만 어선은 전국 등록부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별 주정부에 등록 되어야 함.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미국 선박 또는 공해 조업을 하는 미국 선박 허가 사항은 NFMS가 관리함
- 선박 등록 및 어업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기 다를 경우, 동 기관들은 상호 협업하고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현재 NMFS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과거 조업 전력에 관한 정보를 해경의 NVDC와 연계하는 것을 연방 서류 등록이나 각 주정부 선박 등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매그너슨 스티븐스법 제401절은 상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타 기관과 협업하여 “선박 등록부 표준화 실시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보 관리 체계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현재 NFMS는 연방-주정부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국가 어선 등록부” 및 “수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NVDC에 선박을 등록하려면 선주는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이 미국 내 건조되었다는 사실 및 과거 기국에서 등록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이를 통해 선박이 선적을 빈번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선박이 과거 어디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음

■ 다수의 RFMOs에서는 용선 약정이 IUU어업 활용 방지를 위해 조치 마련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용선 약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보고, 통제 및 지도 단속 의무 규정을 공식화하는 조치를 채택하였음
- ICCAT에 따라, 미국은 국적선이 NMFS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고 어획량을 보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은 ICCAT 관리 어종 조업에 사용되는 미국 용선에 대해 면책 어업 허가를 발급하고 보고 의무를 연동함으로써 용선 파트너 국가와 미국이 동일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는 NAFO 타 회원국 국적의 용선 선박으로 자국 입어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이러한 용선 약정으로 어획된 어획물은 입어권을 얻은 회원국의 어획물로 간주되고, 모든 MCS 책임은 기국이 짐

■ MC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은 다수의 선박에 대해 VMS를 의무화

- 미 해경 및 주 정부 지도 단속 공무원들은 미국 EEZ 내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조업 활동을 감시함. 해경은 해상 어업 지도 단속 주무 기관이며, 특별 연수를 받은 NMFS 특수 요원 및 공무원들도 조업 위반 단속 활동을 실시함
- 단, 미국 관할 수역 내 연방 관리 상업 허가 어업에서 무허가 조업은 금지되나 특정 공개 어장이나 연방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어장, 수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장 등 명시적 허가 없이도 조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미국, 시장 제한 조치 활용을 특별 조치로 간주

- 미국은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다자 협의를 통해 마련되고 실행되는 조치를 선호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RFMOs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이러한 무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또한, CITES에서 실시하는 교역 추적 및 인증 매커니즘은 멸종위기 또는 위협에 처한 해양 생물에 대한 IUU어업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RFMOs를 통한 어획문서 및 증명제도

- 미국은 CCAMLR, ICCAT 및 IATTC 등 여러 RFMOs 내에 어획 문서 및 인증제도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음
- CCAMLR 및 IATTC는 어획 증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ICCAT은 여러 어종에 대해 통계 문서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음
- 미국은 CCAMLR의 이빨고기 문서 제도를 전자 서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타 회원국과 협력하는 한편, CCAMLR는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전자 서식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음

■ 미국, FAO 내 피쉬코드 프로그램 추진

- 미국은 FAO 내 피쉬코드 프로그램¹⁾에서 추진한 “IPOA IUU 실행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을 기부하였음
- 미국이 기부한 기금 중 일부는 IPOA 실행을 위한 FAO 지침서 발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기금은 MCS 역량 강화 증진, 편의치적 및 편의 항구 문제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APEC을 통한 태평양 지역 협력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임

1) 피쉬코드는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FAO 행동 규범” 및 관련 국제 행동 계획(IPOA IUU 등) 실행을 위한 자발적 기금 모금 운동임.

2. 일본

■ 해외어업분야 사전 실태자액 보고를 통한 자국민에 대한 국가 통제

- 해외어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은 사전에 실태 투자액을 재정부(The Ministry of Finance)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부처는 공공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획의 경우,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동 조항은 어업, 무기제조 혹은 약물 거래 활동 분야에 한해서 적용 가능함

■ 국가관할 이원 수역에서는 양자 입어약정 수립

- 일본정부는 국가관할 이원 수역에서 조업이 이루어 질 경우 자국민의 관련 국제법 준수 및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입어약정을 수립하거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 적극적으로 참여

■ 무역관련 조치 이행을 위해 ‘무역 관리를 위한 외환 및 대외 무역법’ 적용

- 일본정부는 어업법,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 어족자원보존법, 어선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양한 국내법을 제정함
- IUU어업 방지를 위해 RFMO에서 채택한 무역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해 ‘무역 관리를 위한 외환 및 대외 무역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법을 바탕으로 IUU 어업에 자국민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함

■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구금, 벌금, 몰수 등의 제재조치

- 외국 EEZ 내 IUU어업에 연루된 경우 해당선박은 자국의 법령 혹은 정부령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법에 따라 처벌함
- 국내법 및 정부령 하 제재 조치는 구금(최대 3년) 및 벌금(최대 2백만¥)을 포함하

고, 사용한 어획물, 어구, 어선을 몰수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선박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 IUU어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어떠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마친 후 재정 지원하도록 함

■ 비체약 국가와는 양자회담 진행

- RFMO에 참여치 않고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조업 허가과 같이 자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IUU어업 전력을 가진 선박을 허가하는 몇몇 국가 및 단체와 양자회담 진행
- 일본정부는 RFMO에서 채택한 어업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고, IUU어업 선박을 허가 하는 행위를 중단토록 요청

■ VMS, 검색관을 통한 감시·통제·감독(MCS)

- 공해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은 선박 위치 및 어획량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수역 어업의 경우 선박감시체계(VMS)를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
- 연어, 참다랑어, 눈다랑어와 같이 어획제한량/쿼터제도로 관리되는 어업의 경우 해당 어종이 일본항에 양륙될 때 공무원 또는 공식 검색관이 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함

■ OPRT 등 비영리 단체를 통한 국가 간 협력

- ‘책임있는 다랑어 어업 촉진 기관(OPRT)’이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OPRT는 다랑어 연승어업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책임있는 기국 및 다랑어 연승업계와 긴밀히 협력함. 최근 OPRT의 회원국은 일본, 중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등으로 구성됨²⁾

- 기국에서는 해외에서의 조업활동을 감시하고, 보고 어획량을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OPRT를 통해 기국과 해외 조업선의 정보교류 격차를 해소하고 기국이 공해상 선박을 통제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IUU어업을 방지함

■ 항만국 책임, 규정 위반 시 최대 3년간 구금 또는 4백만 엔 처벌

- IUU어선은 일본의 항구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며, 일본 항구에서 IUU 선박의 어획물 양륙 및 전재활동은 전면 금지됨
- 동 규정 위반 시 최대 처벌은 3년간 구금 또는 4백만엔²⁾임. 비록 양륙선이 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획물이 해상전재 되었을 경우, 양륙은 허용되지 않음

²⁾ 6개국(일본제외)이 수출하는 어획량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헛감용 냉동 다랑어의 90%를 차지함.

IV. 한국형 국가행동이행계획(NPOA) 기본방향

1. 목표

- 한국 IUU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NPOA는 FAO의 IPOA 규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더 나아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규범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원칙

- IUU어업 근절을 위해 기국의 책임, 항만국 책임, 연안국 조치, 시장국 조치 및 자국민 통제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 포괄적·종합적 접근
- 국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이하 “RFMO”라 한다), FAO 등 범세계적 기구, 업계, 어업공동체 및 비정부 간 기구(이하 “NGO”라 한다)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 하에 상호간 밀접하고 효과적인 협업
- 새롭게 고안된 효과적인 억제방법의 이행과 새로운 이슈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 시행
- IUU어업의 근절 조치는 어족자원의 보존, 장기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및 환경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행

- 모든 국가 및 어선에 대해 형식적 또는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

3. 거버넌스 구축

1) 실질적인 역지력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산되어 있는 국내 기관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해외 기관들과 공조하는 것임
- 그간 한국 NPOA가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IUU어업 근절에 있어 미흡했던 원인 중 하나는 실질적인 역지력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금번 NPOA 개정을 통해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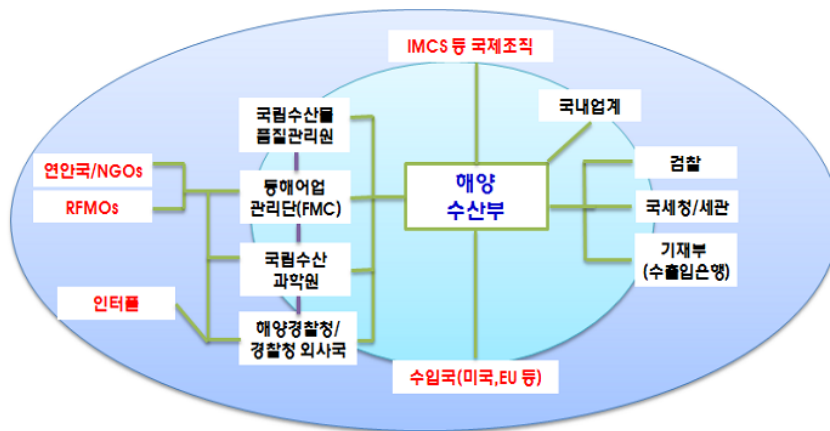
2) 분산된 국내 기관의 유기적 통합

- 해양수산부, FMC를 운영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읍저버 교육과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어획증명서 발급과 항만국 검색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교환 및 교차확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세관의 수입 통관자료, 어선의 VMS, 연안국, RFMOs 및 NGOs가 제공한 제보 등을 분석하여 자국 원양어선의 IUU어업 또는 IUU어획물 국내반입 여부를 판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여 효

과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불법어선 소유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재부의 「외환거래법」상 신고사항을 활용하고, 의심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해외 수산업 투자를 관리함

〈그림 3-1〉 IUU어업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방향



- 한국은 IUU어업 근절 노력이 합법적인 어업인 및 수산기업에 이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시스템을 합리화시키고, IUU어업 근절 노력에 참여하는 업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며,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는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병행되어야 함

3) 해외 기관간 정보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국내 MCS 담당기관은 RFMO, 연안국 및 NGOs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IUU어업의 선박 정보 및 IUU어업 어획물의 수출입 자료 등을 수집하고 교환하여 IUU어업 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 한국의 해양경찰청 외사국과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산기업들의 범죄사항을 조사하여 공유하는 한편, 편의치적 등의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어업 단속 전문가들의 모임(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Network, 이하 “IMCS Network”라 한다) 등 국제조직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
- EU,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IUU어업 어획물이 한국을 통해 수입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V. 한국형 국가행동이행계획(NPOA) 개정(안)

1. 모든 국가의 책임

▶ 국제규범 이행

■ 한국은 수산 관련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임. 1993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국제협약」,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1996년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2003년 「FAO 이행협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였으며, 이외에 COFI, OECD 수산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등에도 가입하여 IUU어업 근절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관련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그 사례로 한국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2004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9년 「유엔 총회 결의 61/105(2006년) 및 64/72(2009년)」에 따라, RFMOs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음. 또한, 2011년에는 「연승선에 의한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국제지침」 및 「상어 보존과 관리를 위한 NPOA」를 마련함

■ 한국은 2014년 1월 31일부터 IUU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해 2009년 11월 FAO 총회에서 승인된 「FAO 항만국 조치 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의 목적과 원칙을 반영한 항만국 검색 제도를 시행중이며, 동 협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2014년 말 또는 2015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임. 앞으로도 한국은 UN

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국제협정에 적극 동참할 것임

- 한국은 2014년 현재 14개의 RFMOs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RFMOs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이행, 기존 국제규범 실행, 신규 규범 개발 및 자발적 과학조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음. 또한, 한국은 여러 RFMOs 중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창설 협약 당사자이며,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에도 참여하고 있음

▶ IUU어업 통제를 위한 국가의 법규

- IUU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한국의 법규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
- 한국은 원양어선의 IUU어업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규정 중 국제수준에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2014년도 말 또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IUU 어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삭제’, ‘행정처분 시 각종 경감규정 삭제’, ‘과태료 인상’,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IUU 중대 위반행위 확대’, ‘IUU어업 혐의로 조사 중인 선박에 대한 선명 변경 및 소유권 이전 제한’, ‘IUU어업 어선 목록 등재제도 도입’ 및 ‘국내외 IUU어업 등재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 등을 추진하고,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MCS 강화를 위해 공해 및 연안국 수역 내 해상전재 및 양륙 등 각종 보고의무를 부과함

▶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한국은 자국민이 EEZ 내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추를 진행함
- 또한, 한국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가 공해 또는 외국수역에서 IUU어업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추를 진행함
- 그간의 NPOA 이행 점검을 통해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한국이 IUU어업과 관련된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해외수역에서 i) 한국인이 IUU어업에 가담한 타 국적 선박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ii) 한국인이 IUU어업에 가담한 타 국적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으로 채용된 경우, iii) 한국인이 타 국가로부터 IUU어획물 또는 수산 제품을 고의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노력이 부족했었음
- 자체적으로 IUU어업에 가담한 자국민의 불법 연계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IMCS Network, RFMO 및 NGOs 등과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임
- 이미 이 조치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4년 5월 IMCS Network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제3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치적을 허용하는 관련국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성문법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법 개정에도 일정 기

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국민이 IUU어업에 가담한 타 국적 어선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선장 또는 선원으로 채용되어 IUU어업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개정 작업 중인 「원양산업발전법」에 IUU어업에 가담한 자국민의 해기사면허 취소, 선원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IUU어업 가담자를 통제할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음

▶ 무국적 선박에 대한 조치

■ 한국은 공해에서 IUU어업에 관련된 무국적 선박에 대해 처벌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하지만 RFMOs 관할 공해 수역에서 승선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RFMOs 등 으로부터 무국적 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입항금지, 동 선박과의 전재활동 금지 및 항만국 검색 등 국제법과 일치하는 필요한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IUU어업에 대한 제재 조치

■ 한국은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자국민에 의한 IUU어업의 방지와 IUU어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충분한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음

○ 먼저 한국의 EEZ 내에서 이루어진 IUU어업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IUU어업으로 어획된 어획물 등을 몰수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외국수역 또는 RFMOs가 관할하는 공해수역에서 IUU어업에 가담한 원양어업자에 대해서도 그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IUU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가 있음

○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IUU어업 종사자까지도 처벌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014년도 말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중임

■ 미국이 IUU 위반에 대해 30만 달러~7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해양경찰의 단속 경비까지 추가하여 징수한 사례(1996년, 1997년, 2000년 제재조치)³⁾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법제상 양형규정을 고려해볼 때 이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우 강경한 제재조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IUU어업의 폐해에 대한 전 국가적 공감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UU어업자에 대해 점차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IUU어업 억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

■ 한국은 IUU어업 어선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어선 및 선사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융자지원 등을 회수 또는 중단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국형 감시, 감독, 통제(MCS)

■ MCS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어, 전재, 양륙, 가공, 판매 및 소비까지 추적하는 포괄적 MCS가 실시함

○ 특히 MCS 조치를 어획증명제도 등 시장관련 조치들과 연동시켜서 교차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함

³⁾ 미국의 NPOA-IUU 제3차 개정안.

■ 효과적인 MCS 조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RFMOs와의 협력, 출어 및 양륙단계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공, 판매 및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한국의 IT 기술력을 토대로 효과적인 IUU어업 근절 기술들을 고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한계로 IUU어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IUU어업 근절노력 확산에 기여할 계획임

▶ 모든 선박의 기록 및 허가받은 현재 소유자·운영자에 대한 기록 유지

■ 모든 어선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야만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음. 어선의 기록은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지원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모든 어선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을 통해 허가를 받은 현재의 소유자와 운영자 확인이 가능하며, 그 기록도 유지되고 있음

▶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 한국은 2013년 10월 「어선법」을 개정하여 총톤수 5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들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VMS(AIS, VHF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총톤수 1톤 미만의 어선까지도 VMS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임. 연근해 어선에 대한 조업감시는 해양수산부와 동·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시되고 있는 선박은 약 2만 여척에 달함

- 2013년까지 한국 국적 원양어선은 RFMOs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만 VMS를 설치해 왔으나, 2013년 7월 30일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원양어선은 2014년 7월 31일까지 VMS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 하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2014년 3월 20일 현재 모든 원양어선에 VMS(INM-C, ARGOS, THORIUM, INM-D)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임
- 2014년 3월 28일 개소한 FMC의 실시간 조업상황 감시를 통해 자국적 원양어선들의 IUU어업을 예방·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간 수출용 어획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되었던 해당 어선의 VMS 항적기록 확인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읍서버 프로그램

- 현재 관리하는 국제읍서버 활동 인원은 27명으로 매년 8개의 RFMOs에 파견되어 과학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읍서버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또는 외국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의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조사,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 조사(쿼터 조업선에 한함),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 수집, 관할수역의 RFMOs에서 마련한 어업별 자원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읍서버 승선을 준수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국제읍서버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4-1〉 연도별 국제옵서버 활동 인원수 및 파견 현황

연 도	인원수(명)	파견(건)	승선 수역
2003	4	4	CCAMLR, SPRFMO, NPFC
2004	5	3	WCPFC, CCSBT, IATTC
2005	4	10	ICCAT, CCAMLR, IATTC, NAFO, WCPFC, CCSBT
2006	5	9	ICCAT, CCAMLR, IOTC, WCPFC
2007	6	12	ICCAT, CCAMLR, SEAFO, IATTC, WCPFC, IOTC
2008	9	12	ICCAT, CCAMLR, SEAFO, SPRFMO, WCPFC
2009	9	15	ICCAT, CCAMLR, SEAFO, WCPFC, CCSBT, IOTC
2010	13	16	ICCAT, CCAMLR, FAO41, NPFC, SEAFO, SIOFA
2011	7	14	ICCAT, CCAMLR, SIOFA, SEAFO, FAO41
2012	11	22	ICCAT, CCAMLR, SIOFA, SEAFO, IOTC, FAO41, FAO51
2013	19	34	ICCAT, CCAMLR, WCPFC, SIOFA, SEAFO, IOTC, FAO41, NPFC

▶ MCS 활동 계획 및 자금 지원

- 한국 내에서 MCS 활동은 해양수산부에 의해 매년 계획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및 지방정부 등 여러 기관이 집행을 분담함
- 한국은 최근 MCS 프로그램 극대화를 위하여 외국 수역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통해 한국 국적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외국 어선까지도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FMC를 설치·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원양어선의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어획증명서 발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어획증명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이를 위해 항만국 검색 및 FMC 운영 인력 증원 및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음

▶ MCS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협력적 참여

- MCS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이해와 협력적 참여가 필수적인바, 업계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 협상 또는 RFMOs 회의에 업계 대표를 참석시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규범 수립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음

▶ 사법시스템

- 한국의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방정부 단속 부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사법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련의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있음.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및 기타 정보는 단속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
- 해외에서 IUU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산범죄를 다루는 인터폴 프로젝트 스케일과 한국의 경찰청, 국세청 및 해양수산부가 정보를 공유하여 문서위조, 편법, 탈세 등의 혐의를 밝혀내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법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임

▶ MCS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배포

- MCS 데이터는 MCS 활동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및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해양수산부가 MCS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유인 배포하고 있음
- 한국은 2014년 5월부터 MCS에 관한 국제적 정보 수집·교환 등을 위해 국제어업 단속 전문가들의 모임인 IMCS Network에 참여하고 있음

▶ 승선검색 제도

- 한국은 승선 검색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과 일치하는 자체 「승선 검색 매뉴얼(2008년 11월)」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동 매뉴얼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16일까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 내 1차 승선검색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2013년 6월 4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차 승선검색 활동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승선검색 제도 이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국제법 및 국내법에 부합하는 승선검색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국가 간 협력

- 전 세계적 차원에서 IUU어업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양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경주된 노력은 특히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한국은 현재 인근 연안국인 러시아연방, 일본 및 중국과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1년 9월 16일 체결한 「정부 간의 어업 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2009년 12월 22일 양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음
- 동 협정은 2010년 7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정보교환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양국의 수역에서 생산된 해양생물자원을 운송하는 양국 선박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 양국은 동 협정의 이행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IUU어업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우려해왔던 IUU어업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류의 유통이 한국의 강력한 항만국 검색 제도 시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어업별 어획할당량, 조업 구역 및 조업조건 결정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국 어선들에 의한 IUU어업을 방지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은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200해리 EEZ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중 EEZ 내 상호 입어균형 유지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음

○ 동 협정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한·중 EEZ 내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동등 유지 및 중국어선의 조업규제 및 불법어업 근절 대책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어선들에 의한 IUU어업을 방지하고 있음

■ 러시아 베링해를 제외한 한국의 원양어업 3대 축은 중서부태평양 해역, 포클랜드 해역, 서부아프리카 해역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한 IUU어업 근절 노력은 잘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국제수산기구가 없는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 선박에 의한 해상전재 등 IUU 어업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이 조업하는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과의 국가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음

○ 우선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IUU어업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니와는 2014년 7월 IUU어업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한국 국적선의 조업이 많은 기니와 기니비사우 정부에는 연안국으로의 국적

전환 거부 및 조업상황에 대한 교차확인을 위해 로그북 제공을 요청하였음

- 지리적으로 먼 해역인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감시를 위해 한국이 라스팔마스에 설립한 한·스페인 해양수산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연안국,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IUU 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라스팔마스에서 양성한 국제음서버를 승선시켜 국적선뿐만 아니라 외국어선의 준법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한국은 2014년 4월 17일 서부아프리카 수역내 IUU 혐의선박 11척에 대해서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협력 진행 중에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음

▶ 정보 공개

- 한국은 IUU어업을 근절하고 국제 수산물 규범 및 국내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IUU어업 관련 정보를 러시아, 일본 및 중국 등 관련 국가 및 RFMOs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월 31일부터 항만국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IUU어업 정보 및 조차사항을 신속히 선박이 등록된 국가 및 해당 RFMO에 제공하고 있음

2. 기국의 책임

▶ 어선등록

-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수산업법」을 통해 자국적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소유한 모든 선박이 어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시·군·구)에 등록되어야 함
- 그 어선의 소유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어선은 중앙정부(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연안 및 근해어업 어선에 대한 등록과 어업허가는 모두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등록과 어업허가를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음
- 원양어선의 허가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서울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수산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의 어선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은 다수의 RFMO에서는 용선 약정이 IUU어업에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RFMO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선의 용선을 허용하고 있음
- 현재 국민들이 타국으로 어선 선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직접적 법적 근거는 없지만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치적을 허용하는 관련국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과 같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어업 단속 전문가들의 모임인 IMCS Network에 가입하였음. 향후 기국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빈번히 편의치적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등을 거부할 방침임

▶ 어선 기록부

- 한국은 1979년 1월 1일 제정·시행하고 있는 「어선법」 제13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IPOA가 요구하고 있는 어선의 이전 이름, 등록자 인적사항, 운영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기록 등 모든 정보(등록 당시 어선 사진은 제외)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관청에서 기록·유지하고 있음
-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2014년 말 또는 2015년 6월 상반기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어업허가 신청 시(5년마다 갱신) 최근 1개월 이내의 어선 사진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임
- 어선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등록 요청 시 해당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모든 등록 어선의 이전 이름, 소유권 및 채무 기록(유치권/저당권 등)을 추적할 수 있음

▶ 어업허가

- 한국의 연근해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57조, 제66조에 따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지방정부에 어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어업허가가 금지되며, 무허가 어업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EEZ 어업법」에 따라 처벌됨
- 또한, 「FAO 이행 협정」에 따라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한국 선박들은 반드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는 한국이 인정하는 국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발급하고 있음

■ 어선에 따른 업종별 어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연안 및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 과거 위반기록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위반에 대해 부과된 처벌만 제대로 이행됐다면 위반 경력으로 인해 허가가 거절되지는 않음

■ 모든 어선이 선박 내 어업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음

- 원양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 내 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하지만 연근해 어선은 어업허가 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어선의 선박 내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음

■ 연근해어업 어선의 선박 내 허가증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IC카드를 부착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전체 근해어업 어선과 일부 연안어업 어선의 종어로 만든 허가장이 모두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되었으며, 2014년 12월까지 모든 어선의 허가장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할 예정임

■ 어업허가장에는 IPOA가 요구하고 있는 선명, 선주(법인 포함), 어업허가 구역, 허가기간, 허가 어획물의 종류, 허가 어구, 어업의 종류 및 어선번호 등을 포함한 어선의 상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선박감시체계(VMS), 어획보고, 전제보고, 오퍼서버 수행사항, 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등과 같은 권고사항 중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어업허가장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감시체계, 어획보고 등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별도 규정과 RFMOs 보존관리 조치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
- 한국은 현재 법령 또는 허가증에 표시되지 않는 해상전재 보고, 옵서버 수행사항 보고, 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2015년 6월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임
- 한국 법은 자국어선, 운반선, 지원선이 IUU어업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재는 반드시 연안국 또는 RFMOs가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음

3. 연안국 조치

▶ 인근 연안국과의 협력

- 어업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한 한·러, 한·일 및 한·중 어업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간 어업협력에 따라 어떠한 연안국 어선도 해당 기국의 사전 입어허가 없이 한국의 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음
- 러시아, 일본 및 중국 국적 어선이 기국의 어업허가 없이 한국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한국은 IUU어업에 해당되는 동 어선을 나포 및 기소하게 됨
- 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양자 간 회의를 통해 IUU어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자국 EEZ 내 입어계획 및 IUU어업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음

▶ 한국 관할 수역 내 외국 선박에 의한 조업

■ 한국 EEZ 내 외국 어선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양자 간 협정에 따름

- 한국 EEZ 내에서 조업 중인 외국 어선은 양자 협정에 근거한 일본과 중국 어선임.
한국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의 무허가 불법 어업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선박은 나포되어 한국 내 항구로 강제 입항 후 기소되고,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로는 선박 및 어획물이 압수되기도 함
- 한국 당국이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위반 근거를 기국에 송부하여 기국에서 기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관할 수역 내 외국 국적에 의한 IUU어업은 인접 국가인 중국 국적 어선들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매년 약 400~500여 척이 영해침범, 무허가 어업 및 조업조건 위반 등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동서·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에 적발되고 있음
- 이들에게 징수된 담보금도 2011년 140억 원, 2012년 171억 원, 2013년 2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항만국 조치

■ 2014년 1월 31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관여 또는 불법어획물 운반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였음

- 외국 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하고 한국 항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24시간 전 항만국 검색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선박 정보, 어획물 정

보 등을 기록한 입항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항만국 검색기관은 입항신고 서류 및 IUU어업 가담여부 등을 확인하여 항만국 검색대상 선박을 결정하며, 항만국 검색은 조업허가증, 전재확인서, VMS기록, 조업일지, 어구 및 어획물 등 선박이 보유한 모든 문서와 장비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함
- 불법어업이 확인된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금지 또는 어획물의 하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검색결과를 선박의 국적 국가와 관련 RFMO에 통보함
- 2014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3건의 불법어획물이 적발되었으며, 이를 관련국에 통보하였음. 또한, 한국 국적 선박의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출항을 금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소추를 진행함
- 항만국 간 IUU 근절 활동 공조를 위한 「FAO 항만국 조치(2009년)」가 조속히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14년 말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국내비준을 완료할 예정임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 관련 조치

▶ RFMOs를 통한 어획문서 및 증명제도

- RFMOs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채택한 다양한 조치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이하 “ICCAT”라 한다)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어획 증명서 또는 통계서류가 없는 국가로부터 참다랑어, 냉동눈다랑어 및 황새치 어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RFMOs 관리어종 수입 시 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인도양참치 보전위원회(IOT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에서 정하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어획문서 및 증명제도 이행을 위해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및 「황새치 수출입 확인요령」고시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각 RFMOs의 필요에 맞게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되는 전자문서 제도가 말로 가장 효과적인 시장조치 방법이라 생각함에 따라 CCAMLR의 이빨고기 문서 제도를 전자서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위해 회원국과 협력한 바 있으며, 현재 어획 문서 제도의 전자서식 변환을 추진 중인 ICCAT 및 CCSBT 작업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한국 내 어류 및 수산제품 일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 한국은 “연근해 및 양식수산물의 수산물이력추적제(20개 품목)”, “수입물품유통이력제(13개 품목)”, “원산지 표시제도(전 품목)” 등을 통해 한국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자국민이 연근해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특히, 원양어업자가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어획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어획물의 몰수 또는 하역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외국수역 또는 RFMOs 관할수역에서 IUU어업에 가담한 자국민 통제를 위해 원양어업자 뿐만 아니라 IUU어업 종사자까지도 처벌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2014년 말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임

▶ 교역 데이터 수집 및 인증제도 표준화

- 한국은 현재 어류 및 수산제품에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6. RFMOs를 통한 국제행동계획(IPOA) 실행

- 한국은 공해어업 관리를 위해 설립된 다수의 RFMOs 회원국으로서, 해당 기구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채택한 구속력 있는 보존관리 조치들을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설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등 신규 설립될 예정인 기구에 대해서도 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

7.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 한국은 개발도상국 담당자들의 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태평양 도서국, 서아프리카 연안국, 인도양 도서국의 공무원 및 연구원을 초청하

여 3주간 한국의 선진 수산양식 정책 전수, 원양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과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관리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중서부태평양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 현지에서 연안국들과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 대상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베트남 감척어선 무상지원 및 기니만 인근 국가에 어장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선박 기증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연안 개도국은 수산물을 통해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IUU어업은 연안개도국의 식량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의 자원 보호 및 관리 노하우를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IUU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외에도 연안개도국의 폐어구에 따른 고스트피싱 등이 자원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됨에 따라 2014년에는 연안개도국 중 1개국에 대해 폐어구 수거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연안개도국들이 지속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참고문헌>

그린피스, *Oceans in the balance*, 2013

농림수산식품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2005.

박민규,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3호,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포커스 66호」, 2013.

해양수산부,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3. 1

Department of Agriculture, Australian Government,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national plan of action”, 2005.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www.ejfoundation.org

Fisheries Agency of Japan,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IPOA-IUU)”, 2004. 3.

Greenpeace, www.greenpeace.org

MRAG(united kingdom), “Review of impacts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n Developing Countries”, 2005. 7.

MRAG, “Review of Impacts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n Developing Countries”, 2005.

Pew Environment Group, “Closing the Gap: Comparing Tuna RFMO Port State Measures with the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ew Environment Group: Washington DC., 2011.

EU,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fo/index_en.htm

FAO, www.fao.org

NOAA NMFS, <http://www.nmfs.noaa.gov>

http://www.nmfs.noaa.gov/ia/iuu/msra_page/2013_biennial_report_to_congress__jan_11__2013__final.pdf

부록 :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국내 법규

법률명	지도단속 당국	지리적 적용 범위	위반 행위	처벌수준
수산업법 (법률 제12084호)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해양경찰	한국의 EEZ 및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무면허 어업(제8조, 제41조, 제42조, 제57조, 제66조) •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EEZ에서의 무허가 어업(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2086호)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해양경찰	한국의 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및 유탄어업 등(제17조, 제25조, 제37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 위반(제14조, 제15조,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1982호)	해양수산부	외국 수역 및 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무면허 어업(제6조)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제13조) • 항만국 검색 조치 위반(제14조) • VMS 미설치(제15조) • 조업실적 등의 보고 위반(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 등 위반(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물 가액의 3배 해당하는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 원양어업 허가 : 위반 횟수에 따라 : 경고·정지(최대 120일)·취소 처분 • 해기사 면허 : 위반 횟수에 따라 : 정지(최대 120일)·취소 처분

법률명	지도단속 당국	지리적 적용 범위	위반 행위	처벌수준
어선법 (법률 제11754호)	지방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의 명칭 및 표시사항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한 후 어업(제16조) 무등록 어선(제13조) VMS 미설치(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으로 사용 금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1643호)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한국의 내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제19조) 무허가·무면허 어업(제6조, 제9조) 불법어업(제21조의2)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및 유향어업 등(제22조) 무신고 어업(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EZ 어업법 (법률 제11690호)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해양경찰	한국의 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무면허 어업(제4조, 제5조) 불법어업, 불법 해상전제(제10조, 제11조,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억원 이하의 벌금 2억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2호)	환경부 지방정부	전 세계 모든 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의 불법 어획(제14조)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의 불법 어획(제1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국제거래(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